

수해 구레민 “정부, 배상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

섬진강댐 홍수피해 청구액 ‘48% 조정 결정’ 철회 요구 ‘72% 배상’ 합천댐과 격차 “영·호남 차별 하나” 성토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2020년 8월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부재정조정위원회의 보상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방류로 수해를 겪은 구레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조정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피해주민들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섬진강댐 하류 수해 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은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표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김봉용·김장승·최성현)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조정위원회의 ‘48% 조정 결정’에 대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동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찬반 투표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조정 결정은 피해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고 정부를 상대로 ‘즉각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 대량방류에 따른 구레군민 수해피해를 인정해 1차로 피해 신청한 군민 420명에게 63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설명

절 전까지 비슷한 비율로 조정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군민 196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136억 6778만 9461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작년 8월 청구한 바 있다.

구례=글·사진 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5·18보상법’ 무용지물

‘보상 신청 기한 오류’ 개정안 반 년째 행안위 ‘발목’ 해직기자 등 신청도 못해…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개정안에 오류로 기재된 보상 신청 기간의 연장에 대해 정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보상 신청자들은 내년까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신청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5·18 보상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됐다.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됐고,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택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기자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보상신청이 가능해졌지만, 해당 보상신청을 받는 광주시는 신청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지난 7차 보상신청 기간(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측은 보상접수를 받는 상설기구를 제안했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서 기존 7차 기간이 그대로 들어갔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한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8일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행안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법률안 검토보고회에서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은 예산·조사인력 운영이 필요하고, 현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가 나온 후 신청기간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5·18 조사위가 올해 10월께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점(완료까지 최소 6개월 예상)에서 8차 보상 신청기간연장은 최소 내년 중반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당장 해직 언론인들은 고령이라 언제까지 기다릴수 없다”면서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5위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21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고 등급(A등급) 획득과 함께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광주권 1위, 전국 5위에 올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아래 매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조선대병원은 시술·장비·인력의 필수영역 분야에서 모두 충족(PASS)하고 ▲중증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구성비 ▲최종치료 제공률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등에서 모두 1등

급을 기록했으며, 간호등급도 1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감염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응급병동, 응급중환자실 등 진료구

역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구역별 시스템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에게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과학 한류’ 캄보디아로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

왕립프놈펜대에 학과 개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RUPP)에 환경공학과 학사 및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프로젝트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KOICA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중 캄보디아 고등인재양성 왕립프놈펜대학 환경공학과 설립사업으로 추진된다. 프로그램을 위해 왕립프놈펜대학교는 학교 내 신축 5층 건물 전체를 위해 신설 예정인 환경공학과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KOICA는 6년간 미화 690만 달러(약 83억 50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스트가 이번 사업을 전담하게 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국제환경연구소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미화 190만 달러를 지원받아 국립 하노이과학기술대학 출신 학생들을 지스트 대학원 과정에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이 토대가 됐다. 현재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베트남의 환경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업 책임자인 김경웅 소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베트남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에서 결실을 맺었다”면서 “향후 동남아시아에 더욱 전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다문화 학생 이중 언어교육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주관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구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완도·금일동초·보성여중 등에서 베트남어·캄보디아어·태국어 등의 이중언어 교실을 열고 1주 또는 2주일 동안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이중언어 교실에는 전남도청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결혼 이민자 여성 또는 특수외국어 전공자가 강사로 나선다. 학생의 희망과 수준 등을 고려해 매일 2~4시간 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올 한 해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모국어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자존감 함양과 학습력 향상 등의 상승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산하 전남국제교육원도 학기 중 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과 이중언어 캠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부산외국어대와 연계한 원격 화상 이중언어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